

## Special & Report

기획특집

### 제7차 당대회를 앞 둔 아바나와 평양의 당과 군대

이정철

아바나를 찾는 미국인 관광객이 연간 60만 명을 상회하고, 올 해 들어서 그 수가 50%나 폭증했다. 전체 관광객 수는 지난 해 이미 300만을 넘어 전체 인구 1,100만 명의 섬나라를 헤치고 다녔다. 한마디로 쿠바는 이미 핫(hot)한 관광지가 되었다. 60-70억 달러대에 달하는 쿠바 무역수지 적자의 1/3을 관광 수지 흑자가 메우고 있는 현실이다. 나머지는 의료진 등 인력 수출에 따른 외화 수입과 미국에서 보내온 해외 송금이 공란을 채우고 있다.

이런 나라를 평가하기에는 쿠바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 남한 크기의 1.1배에 달하는 쿠바를 2-3일간의 짧은 아바나 관광으로 이해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다. 아바나의 부패와 바가지요금에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시장화 과정에서 부패와 지하경제가 공존한 나라에 대한 경험과 실망의 사례는 많다. 과거 중국과 베트남이 비근한 예이다. 그러나 급속한 변화에 변화를 겪어온 지금의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젠 우리가 만만히 보기 어려운 ‘셴’ 나라가 되어버렸다.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느낀다는 문화체험의 진리는 아바나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쿠바를 만끽하려면 우리 머릿속의 붉은 체 게바라를 지우고 일상적인 쿠바인을 대면해야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에게는 쿠바가 체 게바라의 땅일지 모르지만 미

국민에게 쿠바는 헤밍웨이의 섬이자, 마이애미에 정착한 ‘리틀 쿠바노’의 고향이기도 하다. 쿠바의 중부 도시 산타 클라라 광장에 우뚝 서 있는 체 게바라 기념비를 굳이 찾아가는 관광객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미국인의 시선은 때로는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필자가 거리에



산타 클라라 광장의 체 게바라 기념비 (출처: <https://travelfarandclose.wordpress.com>)

서 만난 쿠바인이 체 게바라에게 보인 반응 역시 무덤덤하기만 했다. ‘사회주의자냐’라는 물음에 애국자일 따름이라고 답한 아바나 의대생의 답 역시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1. 아바나의 제7차 당대회와 라울 카스트로 체제

올해 4월 쿠바 공산당은 7차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는 라울 카스트로가 주관하는 마지막 당대회가 될 것이 확실하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 평의회 의장은 2018년 모든 공직에서 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직까지 카스트로 형제를 대체할 리더십은 분명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쿠바 공산당은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쿠바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쿠바에서 인터넷 열기는 뜨겁지만 접속은 제한적이고 고비용이다. 시간당 2달러의 쿠폰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공공인터넷망용 핫스팟은 전국에 36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IMO라고 부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쿠바인은 세계인과 소통하지만, 비용 때문에 성이 차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 연대의 길은 무르익고 있지만 동시에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공산당은 사실상 이데올로기 지배를 벗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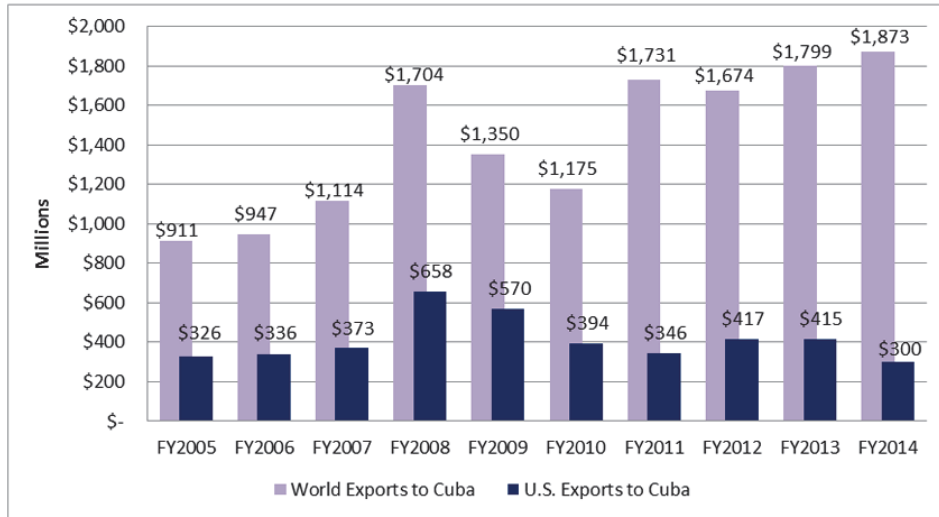
나 실용주의로 무장한 군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당대회가 열리지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주의 정책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또 쿠바의 다음 5년을 결정할 7차 당대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이유가 없다는 논거이기도 하다. ‘권력을 군부가 장악하든 누가 장악하든 부가 창출되고, 인민에게 잘 배분만 된다면 문제될 게 있겠는가’라는 논리가 바로 보통 쿠바인의 심정이다.

실제 쿠바 경제의 60% 이상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군부 인사는 대부분 라울 의장의 측근 장성이라는 점에서 라울 카스트로 체제라고 부르는 현 쿠바 지도부는 공산당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전해진다. 실용주의와 쿠바 애국주의로 무장한 이들 지도부가 공산당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 정책을 밀고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의 향배를 좌우하는 당·군 관계의 경우 쿠바는 군부 일방 주도 체제로, 공산당은 군부를 통제할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당·군 관계의 무게추가 이미 군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 2. 쿠바 개혁과 다가한 전망

지금까지 쿠바의 개혁은 여전히 자영업 확대 중심의 제한적 개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농현상의 대안으로 근교농업과 도시농업 그리고 유기농 협동농장을 들고 나왔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식량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비싼 유기농산물을 수출하고 값싼 GMO 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발상은 기름진 황해도 쌀을 팔아 대량의 옥수수를 수입하던 북한의 자구책을 연상케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제조업은 쿠바에서는 잠재력이 제한적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60% 이상이며 젊은 층 인구가 부족한 ‘고령화 사회’가 역설적이지만 쿠바 개혁의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쿠바에 대한 자본 투자가 제한적인 이유이다. 관광수입이 미래를 이끌겠지만 기형적인 산업 특성상 관광업은 높은 외화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외의존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World and U.S. Agricultural Exports to Cuba – 2005-2014 (FY)



Source: FAS Global Agricultural Trade System, Global Trade Atlas

2005-2014 세계와 미국의 대쿠바 농산물 수출 비교 (출처: <http://www.fas.usda.gov>)

서 선순환의 고리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다. 연간 4%대 성장세가 이런 해외 의존형 성장의 특성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쿠바의 제1교역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 침체 역시 쿠바의 7차 당대회에 압운을 드리우는 요소이다.

쿠바의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국 정부는 쿠바와 수교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쿠바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국유화한 미국인의 자산을 반환하라며 카스트로 정부를 은밀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 쿠바인의 미국 이주를 조장하는 ‘젓은 발, 마른 발’ 정책을 변경할 태세는 없다. 베네수엘라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소식은 미국 정부에게 쿠바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쿠바에서 ‘아랍의 봄’을 기대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잘 아는 쿠바 정부의 대응 역시 단호하다. 쿠바 당국은 수교와 관계정상화는 별개라며, 미국에 대한 과잉 기대를 단속하고 있다.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50년의 경제 제재에 대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미국이 조차한 관타나모 기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확고한 논리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쿠바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기한 전망이 교차되고 있다. 일부 쿠바 학

자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개혁론이 회자되고 있지만 정작 쿠바인은 베트남에 무관심하다. 학력 수준이나 산업 구조가 베트남의 초기 조건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의 히스패닉이라는 정체성은 쿠바인에게 자신감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쿠바의 서비스산업이 히스패닉 공동체에서 적절한 분업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기도 하다. 새로운 쿠바 모델의 배경이 되는 논리이다.

### 3. 북한의 제7차 당대회와 핵·경제 병진 노선의 향배

같은 7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북한의 경우 쿠바와 차이는 확연하다. 쿠바가 우호적인 히스패닉 공동체를 갖고 있다면, 북한에게는 경쟁 사회인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쿠바가 중남미 최고의 교육 수준과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주변국은 북한이 경쟁하기엔 너무나 초강국들이다. 오바마 정부는 100만이 넘는 쿠바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를 통해 쿠바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편견의 벽도 높기만 하다. 마이애미의 쿠바인은 오바마의 쿠바 정책을 찬성하고 있지만, 3만을 채 넘진 한국의 탈북자들은 김정은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차이가 북한이 자기 체제를 퐁퐁 싸매고 핵무기를 놓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북한의 경우, 한동안 국방위원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군부 경제라는 착시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착근하는 과정에서 노동당의 존재가 확연히 가시화되었다. 당국가 체제라는 인상을 확실히 줄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노동당은 군부에 대해 확실한 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모토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 10월 16-28일) 때 흐루시초프가 케네디에게 보인 유화적 태도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당시 김일성은 미국의 강경 대응에 흐루시초프가 타협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립 국방이 불가피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북한은 60년

대 초반 중소 논쟁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던 북한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력 강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쿠바 사태가 10월 28일 끝난 불과 2개월 후 중앙위원회에서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소련



1980년 북한의 제6차 당대회  
(출처: <http://www.theguardian.com>)

이 내뿜개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그때부터 북한은 경제와 국방을 아우르는 이중의 구획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모든 생산 시설에 독자적인 군수품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군의 자원을 보장함으로써 군의 역할을 높이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군대에 대한 당의 인적·물리적 통제가 이중으로 강화되어 군대는 철저히 당의 지도하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젊은 후계자는 할아버지가 주창한 병진이라는 구호를 다시 들었다. 국방·경제 병진을 핵·경제 병진으로 바꾼 것이 차이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병진을 의미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북한이 2013년 헌법에 핵국가임을 명기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진노선은 핵개발을 강조하는 안보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병진이 내포하는 관료 정치의 동학이 있다. 즉, 군과 당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정책 요소라는 해석이다. 이 점에서 병진 노선은 정책 논쟁에 대한 해법이지만, 동시에 당·군간 관료적 이해에 대한 조정 선언으로도 독해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핵·경제 병진 노선은 쿠바와는 달리 당과 군이 경제와 안보라는 각각의 국가발전 전략의 한 축을 맡고, 상호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역할 분담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당은 군에 대한 정치적 지도 노선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통제를 유지한다.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올해 5월에 개최될 북한의 7차 당대회는 그보다 한 달 전에 열리는 쿠바의 당대회에 비해 매우 초라해 보일 수 있다. 북한의 군부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당의 군대이고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한 ‘강군’이다. 이들이 내년 미국과 대결전을 주도할 경우, 북한의 7차 당대회는 연기될 가능성마저 상존한다. 북한의 당은 주체라는 자강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투적 전위다. 이런 당이기 때문에 당·군 관계가 갈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당이 주도하는 경제 개혁의 전략적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는 인상이다. 최근 성장을 맞본 북한 경제 역시 폐쇄형 생존 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 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랐음을 당과 군의 지도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한 이중적 전망이 공존하는 이유이다.

#### 4. 평화적 7차 당대회를 기대하며

쿠바의 경우 군부는 당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실용주의로 무장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의 수교로 쿠바에서는 군이 매우 적극적인 개혁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내년 초 한미군사 연습 시기 북한의 7차 당대회의 운명이 결정될 듯하다. 이 시기 다시 한번 대결전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7차 당대회는 반미 성토장이 될 것이고, 이 시기 대안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7차 당대회는 쿠바의 7차 당대회를 따라 기대와 희망의 서막이 될 것이다.

아직도 배급 체제가 살아 있고 이중 화폐 체제가 기능하고 있는 쿠바는, 북한에게는 심정적으로는 마지막 의지처일지도 모를 일이다. 북미 관계의 긴장을 극복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한이 외부 세계에 손을 내밀 상황이 되면, 한 달 전 열리는 쿠바의 7차 당대회가 북한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것이다.

---

이정철 —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